

기능성 도시숲 본격 확대

전북도, 324억원 투자... 14개 시·군 녹지공간 조성 미세먼지 저감·대기정화·휴식·정서함양 힐링효과

전북도는 최근 미세먼지 등 공기질(대기오염)이 악화됨에 따라 도심속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정화 등을 위해 7개사업에 324억원을 투자, 도내 97개소에 도시숲을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생활권내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2ha이상의 대규모 도시숲을 전주, 익산, 고창에 조성하는 등 9개 시군에 18ha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 도심재생공간 혼분로 가로수 2km를 비롯하여 14개시군에 34km를 조성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도시로 유입 시키는 한편, 시군마다 특성을 살린 거리 조성을 통해 휴식 정서 함양 등 도시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학교 유휴지를 활용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녹색쉼터 제공을 위해 명상숲 27개소를 조성하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을 진안 등 3개시군에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조성사업은 75억 원을 투자하여 전주시 등 13개시군에 673ha를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재수종은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산

림에서 고사한 표면이 거칠어 미세먼지 흡수가 많은 소나무, 편백나무류 중심으로, 도시 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및 쓰레기 소각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침·활엽수를 혼합 식재하여 대기환경 개선 등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과 노후산단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도민의 고통을 줄이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숲의 미세먼지 흡수·흡착 기능과 폭염 완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비 132.5억원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도시 바람길 숲은 도시 외곽산림과 도심의 숲을 선형으로 연결하여 외곽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전주시 백제대로, 팔달로, 소풍길 등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숲을 조성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총사업비 65억원을 투

자하여 노후 산단 주변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도시숲을 조성 할 계획이다. 차단숲은 생활권으로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차단·흡착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 및 나무식재 등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의 1,000만그루 나무심기, 군산시의 500만그루 미래의 숲, 익산시의 500만그루 그린에코시티 조성 등 시군별 자체 특색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일 개최되는 식목일 행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악취저감 등 도시숲 조성 일환으로 혁신도시지역에 개최할 계획이다.

그동안 식목일 행사는 산림 복원차원에서 개최된 반면 이번에는 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지역발전 상생 프로젝트 차원의 전북도·완주군·국립농업과학원이 손을 잡고 호남고소득로 주변 부지에 2km 복합수림대를 조성하여 혁신도시 미세먼지·악취·소음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 김용만 환경복지국장은 "앞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숲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전북 만들기는 물론, 도시숲 이용객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과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농진청, '떡볶이 떡' 상온 장기 유통 기술 개발

김행란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떡볶이 떡이나 떡국 떡의 유통기한을 상온에서 8개월까지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 72년 만에 제주 4·3 희생자 애도·유감 표명키로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건 발생 72년 만에 공식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일 "밤이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서주석 차관이 금명간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찾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공식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1절 군중을 향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시작으로 1954년 9월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7개월 동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1만 245명이 숨지고, 357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 수 치일 뿐 실제 인명피해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된다. 당시 제주도 인구 10분의 1 이상이 복숨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4·3 사건이 국가 폭력으로 인정된 이후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군 당국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었다.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군경이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현 정부 들어 5·18 민주화운동에 이어 제주 4·3 희생자에게도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한편,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 일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생존 희생자, 유족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1주년 4·3 추념식이 거행된다.

/뉴시스

“진실 위해 싸우는 시민 지키는 일은 경찰 임무”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서 장자연 사건 증언 윤지오씨 신변 보호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시민이 신변의 불안에 호소하고 있다. 그런 시민을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드리는 일은 경찰의 기초적인 임무에 속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장자연 사건"을 증언한 배우 윤지오씨의 신변 보호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린 몇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씨는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9시간 가장 응답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총리가 말한 '몇 가지 수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주문한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유명 연예인이 관련된 비닝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문제들에는 검찰과 경찰의 연루 의혹도 포함된다"며 "모든 의혹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혀 검찰과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경제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하방압력에 놓여 있다. 지난주 보아오 포럼에서 만난 중국 리카칭 총리도 세계경제와 중국경제가 처한 하방압력을 몇 차례 나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 더구나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선박 수출 증가, GM 군산공장 매각 등 일부 업종·지역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한국 경제는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은 아직도 어렵다"고 진단하며 "위기지역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현재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날 당정정이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를 담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뉴시스

폭력행위 방지로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한다

전북체육회, 간담회·전문강사 위촉식 열고 선수 권익 보호활동 돌입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선수 권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 스포츠인권익센터 간담회 및 전문강사 위촉식'을 열고 선수 권익 보호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폭력·폭언 등의 폭력행위와 성 범죄 등을 방지에 명랑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 운동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적이고 불미스러운 일을 파악, 신속하게 처리해 선수들의 권익 대변과 보호

지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스포츠인권익센터는 센터장과 전문강사, 강사 등 총 8명으로 운영된다. 센터장은 도 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이며, 인권 관련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범죄 신고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스포츠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제2차 피해를 우려, 신고를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찾아가는 인권향상교육과 함께 인권 관련 전방위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비밀유지와 신변보호 등 철저한 피해자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온·오프라인 모두 활용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콜센터 운영 계획도 추진중이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공고 제2019-245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조 결정일	비고
변경	2	사회복지시설	김제시 서암동 516-1번지 일원	17,379	중9,767	27,146	김제시고시 제2012-46호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	사회복지시설	· 면적 : 27,146㎡ (중 9,767)	· 장애인 평생교육 및 직업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확장

3. 주민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도시재생과

4. 주민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 나. 제출방법: 김제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공람기간내 제출
- 다. 제출장소: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도시재생과

5. 관계도서: 실용생략공람장소 비치

6.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3일 김제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